



## EU 과학기술정책 현황과 협력방향

류 중 익\*

● 목 차 ●

1. 서 론
2. EU의 주요 정책현황
3. EU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 프로그램
4. EU와 과학기술협력방향

### 1. 서 론

유럽통합에 대한 논의는 이미 14세기 초부터 다양한 통합방법과 목적을 제기한 통합자 및 사상가들에 의해 제기되어져 왔다. 유럽에서 정치, 경제적 통합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경제재건을 의도한 마샬계획(Marshall Plan)에 따라 1948년에 창설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와 함께 시작되었다. 1941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6개국은 슈만플랜(Schumann Plan)에 기반한 파리조약(Treaty in Paris)에 서명하고,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설립함에 따라 유럽에서 최초의 기능주의 통합의 길을 열었다. 그 후 1957년 로마조약(Treaty of Rome)의 체결로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가 설립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럽의 경제통합이 본격화되었다. 1967년 ECSC, EEC, Euratom의 3개 공동체는 통합조약에 의해 새로이 유럽공동체 EC(European

Community)로 재탄생하였고,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1973), 그리스(1981), 스페인, 포르투갈(1986),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1995) 등이 가입하여 EC 회원국은 1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이라 지칭되는 유럽연합조약(Treaty of European Union)의 체결로 EC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으로 재편되었고, 2002년 1월 유럽단일통화(Euro) 도입과 사용을 계기로 경제, 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 러시아 등에 대응한 강력한 중심세력으로 부상하였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EU는 미국, 일본과 더불어 세계수준의 과학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중심지로서 우리의 과학기술 국제화 전략에 부응한 선진 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해 EU와의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U의 과학기술정책기조는 미국, 일본 등에 대응하여 EU 회원국의 공통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자원의 집중 및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기존의 과학기술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고 유럽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U의 국제사회에서 위상제고, 과학기술 통합활동의 가속화, 선진 유럽국가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 기술협력 1과장

와의 협력기반 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EU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활동에 대한 정보를 분석,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과 EU와의 전략적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 국제화 전략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EU의 주요 정책현황

그간 유럽통합 활동은 주로 경제·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경제공동체를 완성하는 등 상당한 진전과 성과를 달성하였다. 유럽연합은 2002. 1월부터 Euro 단일통화가 일반시장에서 유통되고 통합된 금융 및 공공재정 정책, 역내 노동시장 개방,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통일된 규범과 제도의 시행으로 경제·사회적 통합체제를 구축하여 세계 경제와 무역거래에 있어서 단일화된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고, 군사·외교적 활동에서도 통일된 정책 노선을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 일본 등에 대응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국제 경제 및 정치·외교적 환경변화는 EU차원의 새로운 대응 전략과 정치력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 디지털 경제에 의한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WTO체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보다 응집된 EU차원의 통일된 경제정책과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게 되었다. 동구권국가 등의 신규유럽연합 가입(2000. 11월, Nice EU정상회의)에 따른 기존 경제·사회질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가간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EU확대에 의한 경제·외교·유럽 안보체제의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EU확대 전략과 이에 부응한 새로운 다자간 EU정부기능체제(European Governance)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확대된 EU의 역내 지역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분쟁지역(발칸,

중동 지역등)에 대한 평화정착을 위한 강력하고 통일된 EU 외교·군사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EU는 새로운 집행위원장의 임기 시작(2000-2005, Romano Prodi)과 함께 EU의 주요 정책방향과 현안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 들어선 EU 집행위는 새로운 EU건설(Shaping New Europe)을 모토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추진계획(White Paper)과 구체적 이행방안(Action Plan)을 마련하여 임기 기간 동안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EU 의회 및 Council은 새로운 EU건설의 핵심주체인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대해 기존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EU 집행위에 대한 개혁 청사진과 구체적 이행방안을 요구함에 따라, 2000년 4월 EU 집행위 개혁프로그램(White Paper)과 Action Plan을 마련, 의회와 Council에 보고하고 2002년 말까지 개혁과제 추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3. EU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 프로그램

### 3.1 과학기술정책 추진체제

EU 주요 과학기술정책은 EU 집행위와 회원국 연구담당 각료회의 (Research Council)간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관련정책과 사업을 수립하고 이를 EU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되며, 확정된 사업들은 EU 집행위 주도로 시행되고 이의 결과를 각료회의와 의회에 보고하는 3각 피드백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EU 집행위는 EU차원의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관련정책과 사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국 연구각료회의의 결정 또는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조정·수립해 나가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통해 공통의 Consensus를 수렴해 나간다. EU 집행위 연구개발관련조직은 EU 집행위 연구집행위

원(Research Commissioner, Philippe Busquin)의 책임하에 산하 연구담당(Research DG) 및 공동연구센터 담당(JRC DG) 2개 전담총국(DG: Director-General)에서 EU차원의 과학기술정책과 관련 R&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 연구총국(Research DG, Achilleas Mitsos)은 EU 과학기술력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EU차원의 연구개발 정책 및 사업을 수립·집행한후 평가하고, EU 회원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관련사업의 종합조정을 통해 EU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며, EU 차원의 과학기술 현안 이슈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과학기술 문화의 확산하는 등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U 집행위 공동연구센터총국(JRC DG, Barry Mc Sweeney)에서는 산하 8개 연구소의 전문집단을 통해 EU차원의 과학기술관련 공통현안이슈에 대한 분야별 전문연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EU 과학기술 정책결정주체(EU집행위, Council, 의회 등)에게 관련정책 및 사업의 입안·개발·이행·평가과정에서 과학기술적 전문지식과 관련 자료를 중립적 입장에서 제공하며, 아울러 EU 집행위의 분야별 집행위원산하 타 총국(DG)과도 관련분야별 정책과 연구개발프로그램(Environment, Health, Energy, Regional Development 등)을 상호 조정·협의를 한다. EU 과학기술정책과 관련사업은 유럽회원국 정부와 관련연구기관간 R&D협력을 통해 실행된다.

### 3.2 과학기술정책방향

EU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 및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EU 경쟁력의 원천으로 EU 과학기술력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이 EU 정책의 핵심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EU의 과학기술활동은 전체적으로 세계 1/3을 점유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우수한 과학기술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전

체 과학기술 투자면에서 경쟁 대상국인 미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주요 개발프로그램도 회원국별로 분산·추진되는 등 미래 지식기반경제구조에 대비한 중·장기적 개발전략과 정책부재에 대한 우려가 많다. 따라서 EU 차원에서 과학기술 투자 확대, 자원의 전략적 배분·활용 및 공동협력체제의 구축 등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과학기술개발 전략과 계획의 수립이 정책적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EU 과학기술정책과 개발프로그램의 핵심으로서 현재 EU 연구집중영역(ERA: European Research Area)을 새롭게 계획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ERA는 미래 지식기반경제에 대비한 EU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개별국가 및 EU의 과학기술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한정된 연구자원을 전략적 분야에 집중하는 효율적인 협력연구를 통해 EU 과학기술잠재력을 유지·발전하는데 있다. ERA의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EU 연구자원 및 연구시설을 일정 임계규모 이상으로 최적화
- EU내 국가연구개발사업간 연계·협력을 강화
- 민간부문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유도 및 벤처기업 육성·지원
- 과학기술에 기초한 EU 정책개발시스템의 강화
- EU 연구인력자원의 유동성 강화 및 최적 활용
- 과학기술투자와 연구자에게 개방되고 매력적인 EU연구환경을 조성
-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공유 및 합의 유도

이러한 ERA 정책방향을 토대로 EU 연구각료회의 및 EU 연구집행위원회의 주관하에 상호 협력과 조정을 거쳐 주요 R&D 프로그램의 추진과 관련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ERA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들은 EU Framework Programme, COST, EUREKA, 우주항공기술개발협력사업, 정보통신기

술협력사업, 핵융합개발사업(ITER) 등 범 유럽차원의 R&D협력사업을 통해 이행된다.

### 3.3 주요 연구개발프로그램

#### 3.3.1 EU Framework Programme (FP)

FP는 EU 회원국의 유한한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럽 산업계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유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EU 차원에서 기획·추진하는 핵심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5년을 기본주기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추진하며, EU가 비용을 부담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활동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연구실행의 단계와 방안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된다. 매 주기별 사업범위와 필요한 예산은 EU 집행위에서 세부사업별로 산출·편성한 후 EU 연구각료회의 및 의회의 심의와 조정·승인을 거쳐 확정되며, EU 집행위는 확정된 사업을 시행하고 이의 결과를 보고한다. 1984년 제1차 FP(1984-1987)를 시작으로 현재 제5차 FP를 실행중에 있으며, 현재 제6차 차기 계획(2002-2006)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평가는 사업개시 후 3년째에 독립된 외부전문가 패널에 의해 이루어지며 평가결과는 차기 FP에 반영된다.

현재 EU 집행위는 기존 FP사업을 새로운 시각에서 전면 재 검토·조정한 제6차 Framework Programme 시안을 마련하여 EU 연구관련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EU 각료회의와 의회에 제6차 FP의 예산규모와 주요 추진사업을 제안하는 등 본격적인 계획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제 6차 FP의 중점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우수연구집단간 정보교류 및 연계 강화(Networks of Excellence)

- 개별국가와 EU의 연구사업간 통합과 조정(Integrated Projects)
- 연구기관간 연구자 교류 및 유동성 확대(Mobility of scientists)
- EU 추가가입 회원국의 연구사업참여 확대 및 세계 우수연구집단과의 연구협력 강화
- 7개 분야 주제별 중점 연구사업 설정(Concentration on Priority Research Area)
  - Genomics and Biotechnology for Health(BT) : 인간유전정보를 활용한 주요 질병치료연구 및 유럽생명공학산업의 육성
  - Information Society Technologies(IT) : 유럽 정보기술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식기반사회에 요구되는 유럽시민의 정보화능력을 배양하여 활용을 촉진
  - Nanotechnologies, Intelligent Materials and New Production Methods (NT) : 미래 신기술개발을 통해 유럽산업을 지식·지능형 산업형태로 전환하여 산업경쟁력의 지속적 유지 및 선점
  - Aeronautics and Space : 기존 유럽의 항공우주 분야 산업경쟁력 및 첨단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고 첨단화된 안전 및 환경보호기술을 개발
  - Food Safety and Health Risks : GMOs, BSE 등 식품의 안전성 증진에 요구되는 첨단과학기술력을 배양하고 유해식품과 환경영향에 대한 위험도 평가기술을 발전
  -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hange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에너지, 환경기술 등 유럽의 과학기술력을 배양하고, 지구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협력활동의 강화 및 관련기술을 개발
  - Citizens and Governance in European Society :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여 유럽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경제, 정치, 인문사회 과학분야와 과학기술연구 영역을 접목하여

## 확대

선정된 7개 중점추진사업은 EU 회원국의 국가 R&D프로그램과 EU FP사업간 조정 및 연계를 강화하여 선정된 분야별 연구사업을 통해 EU내 산·학·연간 연구협력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기존 EU차원의 연구협력사업(COST, EUREKA)과 연계하여 연구 Networking의 매개체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정분야에 EU 연구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우수연구인력이 모이고 연구자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EU 우수연구집단이 형성될 수 있는 지원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대규모 공동연구시설에 대한 통합된 지원활동을 통해 국제간 공동이용 촉진, 연구연계활동 강화,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서 효율적인 연구사업관리를 위해 연구사업 추진주체나 관련기관에 사업관리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거나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협력사업(특히, 중소기업과의 협력사업)의 유형에 따라 연구자율성 확대 및 관련규정의 적용에 유연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세부사업별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2002년 상반기까지 EU 연구각료회의 및 의회의 심의·조정 및 승인절차를 마무리하여 제 6차 FP계획 확정후, 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 3.3.2 COST(Europ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

COST는 유럽내 개별국가 R&D활동을 유럽전체의 과학기술 공동협력사업으로 묶어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는 유럽내 과학기술 공동협력 협의기구이다. COST의 R&D협력사업은 주로 기초(basic) 및 경쟁 전 단계(pre-competitive) 연구로서, 동 협력사업을 통해 분야별로 유럽내 전문연구집단간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

하고 개별국가 R&D활동을 공동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증진시켜 전 유럽의 과학기술저력을 유지·발전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1971년 9개 회원국가로 설립된 COST는 현재 매년 총 연구비 20억 Euro로 150여개 Projects를 추진하고 있으며, 32개 유럽국가(14개 유럽외 국가), 50여개 기관의 4만여명 과학기술자가 참여하고 있다. 90년대 초반까지는 COST를 통해 서유럽과 중앙·동유럽간 과학기술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현재에도 기초 및 기반연구단계의 유럽내 국가간 과학기술 공동연구협력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과제는 최소 개별회원국의 5개 기관이상 참여하에 연구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신청하는데, 국가별 COST Coordinator간 중재로 추진한다. 과제의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보통 4년, 매년 참여기관당 6만 Euro 규모로 지원된다.

### 3.3.3 EUREKA(Europe-wide Network for Industrial R&D)

1985년 시작된 EUREKA사업은 전 유럽내 기업 및 연구·교육기관간 협동연구사업으로, 상업화 기술개발('market-driven' collaborative R&D)을 통한 유럽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1983년 미국 Reagan 대통령의 Star Wars 프로젝트인 Strategic Defence Initiative(SDI)에 대응하여 프랑스 Mitterand 대통령이 제안하여 만들어진 유럽 개별국가간 과학기술협력 연구개발프로그램이다. 31개 유럽국가와 EC의 참여하에 상업화를 위한 첨단기술을 산·학·연 협동연구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연구비는 매년 120억 Euro를 회원국 국가연구비에서 출연하고, 최소 2개이상 개별회원국 참여하에 국가별 Coordinator의 중재로 추진되고 있으며, 과제당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4-5년, 평균 13백만 Euro 규모이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과제는 681과제, 총 연구비 123억 Euro, 3000여 기관이 참여(참여기관중 2/3이 산업계이고 이중 중소기업

이 50%)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된 과제는 1,056과제(총 연구비 136억 Euro)이다.

### 3.3.4 EU 우주기술개발 협력사업

EU는 정보통신, 우주·항공, 원자력·에너지 등 EU의 강점기술이나 미래 신기술 등 특정분야는 범 유럽차원에서 유럽회원국 정부와 관련 산업계·연구기관간 긴밀한 협의·조정을 거쳐 분야별 기술개발정책을 수립하고 공동협력사업에 EU자체 연구개발프로그램인 FP사업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연구개발프로그램의 특징은 기술개발 자체 뿐 만 아니라, 관련 제도와 규범의 마련, 연구주체간(산학연)·개별국가간 역할분담 및 재원부담 범위, 공동인프라의 구축, 관련산업의 육성정책 등 전반적인 정책적 요소를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다. 동 연구개발프로그램의 정책제출과 이행과정에서 EU는 회원국정부(연구각료회의)간 중요한 매개역할을 담당하면서, EU공통의 기반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통일된 정책과 규범의 제정 등을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우주산업은 세계시장에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대표적인 강점산업분야로서 지속적인 산업경쟁력 유지·발전을 위해 유럽국가간 긴밀한 협력과 강력하고 통합된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 분야의 핵심주체인 유럽우주기구(ESA; European Space Agency)는 유럽 개별국가의 공공(연구)기관과 산업계의 컨소시엄으로 EU 집행위와 긴밀히 연계하여 우주기술개발 협력사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EU 차원의 우주개발프로그램은 1997-1998간 EU 집행위의 3개 분야 위성개발 실천계획(Satellite Action Plan : Communications, Navigation, Earth Observation)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제3차 FP사업부터 우주개발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추진해 왔다. 아울러, 유럽차원에서 국가간 우주개발프로그램을 종합조정하고 연구주체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EU 집행위내 우주분야 전문가조정그룹(SCG; Space Coordination

Group, '96년) 및 자문그룹(SAG; Space Advisory Group, '93년)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4. EU와 과학기술협력방향

그간 한국의 과학기술협력은 주로 미국, 일본과 유럽 일부 개별국가(영국, 독일 등)에 치중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세계 과학기술활동의 중심지이면서 국내 과학기술자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 관련연구기관과 인적연계가 두텁고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정보의 접근과 정책적 연구가 활발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점으로 협력이 용이할 뿐 만 아니라, 그간 한국의 산업화과정과 산업구조도 일본 모형을 도입·추진되어 왔고 관련제도나 정책들이 유사하여 협력에 우호적 여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된다. 반면, 유럽의 경우는 기초 및 원천기술분야에서 튼튼한 과학기술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통적 우위의 과학적 강점을 산업화하는데 경쟁 상대국인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미흡함에 따라 우리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과학기술협력활동도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와 정보화시대로 대별되는 새로운 세기는 미래 신기술 선점을 통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튼튼한 과학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욱이, 미래 신기술개발은 기초 및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의 잠재적 능력이 확보되어야 가능하게 될 것으로 한나라의 과학기술력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근간이 될 뿐 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발전은 물론, 사회·문화적 생활양식의 변화까지도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현재 EU는 우수한 기초·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결집하고 과학적 능력을 미래 신산업 창출과 연계·점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EU연구개발 패턴은 연구주체(산·학·연)간 협력은 물론, 유럽국가간 협력연구가 보편화되는 등 개방된(Open

Mind) 협력환경과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창의적 연구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EU와 과학기술협력의 틀과 접근전략을 잘 구축하여 EU의 우수한 연구자원과 잠재능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EU는 국제화를 통한 우리의 과학기술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협력파트너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유럽은 경제적 통합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결집된 과학기술개발전략과 우수연구집단간 Networking을 한층 가속화하고 있으므로 유럽 개별국가와 협력보다는 EU 다자간 연구개발협력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통합유럽(동구권 포함)이 거대한 단일 경제 및 시장규모를 형성하게 됨에 따라 무역과 산업협력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환경규범, 안전기준, 기술표준 등 EU 과학기술력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과학기술 국제화 전략차원에서 EU의 우수한 연구자원 및 연구개발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EU 연구개발정책과 프로그램에 부응한 전략적 협력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EU 연구개발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의 틀을 개발해야 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1세기 Frontier사업과 EU FP사업을 연계한 BT, IT, NT 등 미래 신기술분야에 협력활동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EU 연구개발정책 및 연구활동·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Monitoring, 정책적 분석·연구를 통해 우리의 협력수요를 개발하고 추진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EU 연구정보망 CORDIS(Community Research & Development Information Service)의 적극 활용, EU 연구개발활동 및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홍보하는 전담 홈페이지 구축·운영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 연구개발관련 전문가회의 (Confer-

ence, Seminar, Workshop 등)에 국내 전문가의 참가를 통해 EU 우수연구집단과 인적 연계를 강화하고, 우리의 수요에 부응한 협력사업 개발·추진을 위해 EU 전문가집단의 구축, 협력재원의 확보, 협력전담 기관 및 Coordinator 지정 등 한국의 협력인프라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서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공동 workshop 개최 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차원에서 확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저자약력



류 중 익

- 1984년 기술고등고시 합격
- 1985년-1995년 과학기술부 전자조정관실, 정보산업담당관실, 연구관리과, 기획총괄과 사무관
- 1995년-2002 과학기술부 연구기획과장, 원자력개발과장, 지방과학진흥과장 역임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실 과학기술정책과장 역임
- 2002년 영국 맨체스터대학 과학기술정책학 박사학위 취득
- 현재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 기술협력 1과장